

허원근일병 피살목격 사병들 '헌병대서 가혹행위'

'발설 않겠다' 각서 제출 8명 포상휴가 다녀와

1984년 사망한 고 허원근 일병 자살 조작사건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이 군 헌병대에 의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직후에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군 헌병대의 조사과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8명의 사병들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사병들은 조사가 끝난 뒤 2박3일에서 3박4일씩 포상휴가를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헌병대가 조사를 끝낸 뒤 이들에게서 '조사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군 헌병대는 당시 사병들의 무릎에 곤봉을 끼운 뒤 무릎을 짓밟고 족집게로 머리카락을 뽑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허일병이 상관인 쓴 첫 총탄에 맞아 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허일병에게 두발을 더 쏜 과정과 배경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허일병 사망 목격사병 헌병대서 가혹행위"

"발설말라" 각서 강요 조사후 휴가 다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2일 1984년 사망한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사건과 관련,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중대본부요원 8명이 사단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2주간 집단적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조사 직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사단 헌병대에서 이들 8명에게 "조사내용을 외부에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

까지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부대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의혹이 제기됐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사건이 난 4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중대원 8명이 사단 헌병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받았다"며 "조사 직후 이들에게 2박3일 또는 3박4일간의 휴가까지 주어졌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허일병이 사고 당일 오전 2~4시쯤 발생한 총기오발사고로 숨진 이후 대대급 간부가 참가한 대책회의에서 자살로 은폐하기로 하고, 오전 7시쯤 연대에 자살사건으로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헌병대 조사에서는 사고발생시간

이 오후 1시20분으로 처리된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부대가 사단헌병대인 것으로 드러나 사단 책임자 차원에서 사건은폐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권노갑씨 구속집행정지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건일)는 22일 진승현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에게 내달 22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권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유신기자

“목격자 軍조사때 가혹행위”

“허일병 사망 발설금지 각서” 사병 8명 조사후 포상휴가

허원근 일병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사병 8명이 사단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조사 직후에는 단체로 포상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2일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이 허 일병 사망일인 84년 8월2일부터 18일 사이에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3~4일의 포상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사병들이 조사 도중 무릎 사이에 곤봉이 끼워진 채 군화발로 밟히거나 족집게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조사받은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

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포상휴가까지 보내준 배경과 관련, 사단급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기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규명위는 또 허 일병이 자살했다는 대대의 거짓보고가 이날 오전중으로 연대와 사단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헌병대 조사과정에서는 발생시간이 오후 1시 20분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규명위는 사단급 지휘관과 참모들의 개입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단서로 보고 있다.

한편 규명위는 “헌병대 조사에서 사망 현장에 있었던 11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 10여장씩 진술서를 받았으나 정작 허 일병을 쏜 하사관으로부터는 1장짜리 약식진술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하사관이 같은 해 육군범죄수사단 재조사와 1999년, 국방부사망사고특조단 조사에서는 아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육군·국방부, 허원근일병 사건 조사때 총쏜 하사관은 대상서 제외

헌병대서 목격사병 고문 '함구'각서 쓰후 포상휴가

1984년 하사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과 관련, 2000년까지 진행된 군과 국방부의 3차례 조사에서 범인으로 드러난 하사관만 약식조사를 받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허 일병 사건이 대대나 연대, 사단 등 군 부대를 넘어 육군본부와 국방부까지 관련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84년 7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망현장에 있었던 중대장 소대장 하사관 각각 한 명, 사병 8명 등 총 11명의 중요 참고인 중 10명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소환, 각각 10여 장 이상의 진술서를 받아낸 반면 하사관만 1장 짜리 약식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같은 해 육군범죄수사단(현 육군중앙수사단) 재조사에서는 아예 11명 중 하사관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999년 시작해 2000년 8월까지 진행된 국방부 사망사고특조단 조사에서도 하사관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하사관만 조사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와 함께 헌병대가 사건을 자살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을 연행, 족집게로 머리카락을 뽑고 무릎에 곤봉을 끼운 후 짓밟는 등의 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조사받은 내용을 일절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후 포상휴가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자살조작 목인 사병들 포상휴가 받아 의문사규명위 “군부대 차원의 조직적 은폐의혹”

지난 84년 군부대 내에서 상관의 총격을 받고 숨진 허원근 일병의 자살조작사건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 한 사병들이 헌병대 조사 후 '포상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일보 8월20일자 7면 참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사건 직후 시작된 군 헌병대의 조사 당시 목격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고 조사가 끝난 후 이들은 포상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은 쪽집게로 머

리카락을 뽑히고 무릎에 군복을 끼운 후 무릎을 짓밟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또 허일병이 사고 당일 오전2~4시께 발생한 총기오발사고로 숨진 이후 대대급 간부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자살로 은폐하기로 하고 오전7시께 연대에 '자살사건'으로 보고됐고 이날 오전 중 사단에까지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사단과 연대에서는 군 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고발생시간이 오후1시20분으로 처리된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군 사단 헌병대가 허일병 사건 수사를 가장 처음 담당한 것으로 드러나 사단 책임자가 사건 전말을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당시 해당 중대장을 구속 기소했던 군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를 묵살한 채 구속기소해 군 검찰에도 모종의 압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국방부 특조단 은폐개입 의혹

"대대장이 진술" 주장, 사망한 중대장에 혐의 씌워

1984년 하사관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과 관련, 2000년 사건을 재조사했던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당시 중대장이 월복을 시도하다 전령인 허 일병이 이를 알고 막자 살해했다는 진술을 대대장으로부터 받아냈다”고 지난 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대장은 국방부 특조단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98~99년 길거리에서 변시체로 발견돼 국방부가 사망한 중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장은 84년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강제예편 된 후 90년 초 이혼을 하고 친구집에 얹혀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특조단이 의문사위에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대대장은 “사고 보고를 받고 중대장이 월복하려다 여의치 않아 전령인 일병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월복 사고를 우려해 연대장에게 중대장을 교체 시켜 달라고 건의했고, 사고 후 부대대장(소령)을 중대장 대리로 근무케 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국방부 특조단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허 일병의 아버지인 허영춘(許永春)씨에게까지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위원회는 대대장의 진술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특조단의 은폐 공작 중 일부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입력시간 2002/08/23 17:55

허원근 일병 피살 은폐사건
당시 대대장 허위진술 의혹
사망 중대장에 혐의 씌워

1984년 하사관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자살조작 및 은폐사건과 관련, 당시 허일병 소속부대 대대장이 9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중대장이 월북을 시도하다 전령인 허 일병이 제지하자 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특조단이 최근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은 "사고 보고를 받고 중대장이 월북하려다 여의치 않자 전령인 허일병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월북 사고를 우려해 중대장 교체를 건의했고, 사고후 부대대장(소령)을 중대장 대리로 근무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있다.

한편 특조단은 이같은 진술을 허일병의 가족에게까지 알린 것으로 드러나 군이 이 진술을 근거로 이미 사망한 중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허원근씨 자살조작
특조단도 은폐의혹

1984년 하사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과 관련, 대대장이 199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사건의 책임을 이미 사망했던 김모 중대장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3일 "당시 특조단 조사에서 대대장이 '김모 중대장이 월북을 하려다 전령인 허 일병의 저지를 받자 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음을 지난해 국방

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당시 헌병대 수사에서 허 일병을 자살로 규정한 데 큰 역할을 했던 김모 중대장은 지난 99년초 친구의 집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대대장의 진술이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방부가 대대장의 진술을 조작해 이미 사망한 중대장에게 사건을 덮어씌우려 한 것인지 조만간 대대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택기자

‘許일병 사건’ 국방부 2000년 조사 “중대장을 범인 의심했다”

당시 대대장 진술 ‘새 의혹’ 죽은 중대장에 혐의 씌워

1984년 하사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과 관련, 당시 대대장이 2000년 8월까지 1년여간 진행된 국방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중대장이 월북을 시도하려던 것을 전령인 허 일병이 제지하자 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 특조단이 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에는 대대장이 “사고 보고를 받고 중대장이 월북하려다 여의치 않아

전령인 허 일병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월북 사고를 우려해 중대장 교체를 건의했고, 사고 후 부대 대장(소령)을 중대장 대리로 근무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중대장은 84년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강제예편 된 뒤 90년 초 이혼하고 특조단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98~99년 친구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특조단은 이 진술을 확보한 후, 허 일병의 아버지에게까지 직접 찾아가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조단이 이 진술을 토대로 이미 사망한 중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High-Level Cover-Up of Soldier's Murder Suspected

By Seo Soo-min
Staff Reporter

Investigations into a soldier's untimely death 18 years ago is leading to more and more shocking revelations, this time pointing to a massive cover-up effort in the highest echelons of the military.

The army petty officer who fired the shot at Pvt. Ho Won-kun in a drunken rage on April 2, 1984, was virtually exempted from the follow-up investigations, said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PTCSD) yesterday.

"Out of the eleven brought in as witnesses, including eight soldiers and two officers, only the petty officer was exempted from lengthy interrogations," said a commission official.

Since the follow-up investigations in 1999 and 2000 were done at the Defense Ministry level, it alludes to the possibility of a cover-up effort by top military brass.

The probes led to the same result as the one in 1984 — that Ho committed suicide by shooting himself three times.

The presidential commission's findings after nearly two decades show things went wrong from the very start.

After Ho died, the military police took custody of eight officers, subjecting them to two weeks of interrogation.

Brutalities such as "pulling out hair" and "placing wooden bats behind the knees and pressing down hard on top of them" were used to assure that the soldiers would not tell the truth.

As a reward, all of them were given three to four days of leave after the probe.

In tandem with efforts to muffle the witnesses, the commission revealed that fabricated information was included in military police records of the morning of April 2, when Ho died.

Although Ho was shot be-

tween 2 and 4 a.m., they claim he was severely scolded by a battalion officer around 8 a.m. for the untidiness of his uniform.

As more details of Ho's death are disclosed by the fact-finding commission, public demands for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other deaths are growing.

The PTCSD has dealt with four cases of soldiers' deaths so far. However, families and civic organizations put the number of questionable military deaths in the hundreds.

Army insiders and public investigators, however, concede the formidability of the task.

"Military culture is very much focused on protecting its own. In many cases, instead of officers being court-martialed or demoted, homicides are declared to be suicides," said a government official, asking for anonymity.

Some 300 young men die in the military every year, the Na-

tional Assembly's 2000 audit records show. One third of the deaths are ruled as suicides.

ssm@koreatimes.co.kr

각리잡이



이명원 (비평과 전망) 편집위원

국방부에 따르면 1년에 대략 300여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사망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70% 이상이 자살이라는 게 군의 통계인데, 최근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낸 허원근 일병의 사례를 보건대 이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84년 자살로 규정되었던 그의 죽음은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야 타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새벽의 부대회식 도중 만취한 선임하사가 화장에 허원근 씨에게 총질을 했다

‘어둠의 자식’과 ‘신의 아들’

는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에 두 발의 총질을 더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병과 장교들이 모의하여 자살로 위장하였다고 하니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게다가 그 총질의 원인이 라면이 맛이 없다는 상관의 질책이 촉발한 선임하사의 격분 때문이었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농단처럼 자신들의 처지를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에 빗대곤 한다. 이른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현역으로 군대에 ‘탈러가’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는 원망이 이 풍자적인 표현 속에 담겨 있다.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병

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풍자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병역을 둘러싼 자간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국면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허원근씨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이 표현은 풍자가 아닌 진실로 들린다.

이 풍자가 또 한번 진실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른바 병역비리를 둘러싼 일련의 보도에서이다. 한 신문이 보도한 과거 병역비리 수사

목되었는가 하면, 학력과 본적, 그리고 주소란은 때마침 불문조치 없었는지 비어 있고, 입영 날짜와 신경판정 날짜들이 오라가라 한다. 이런 의혹에 직면하여 이회창씨는 비리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다. 이회창씨의 양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가 의입에 흔들림 없이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같이 찬란한 계절을 만끽해야 마땅한 젊은이인데도, 어떤 젊은이들은 군에서 비극적인 살해를 당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사회적 출세를 향한 순항을 계속할 수 있다는 불명등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 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비하하고, 어떤 젊은이들은 ‘신의 아들’로 칭송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병역문제를 둘러싼 일반인의 정서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해득실의 차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내 아들이, 내 형과 동생이, 내 오빠가, 내 애인이 보충대를 넘어 입소할 때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당신들은 아시는가. 그렇게 군에 간 내 아들이, 내 형과 동생이, 내 오빠가, 내 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야 할 충격과 그 원통한 슬픔을 당신들은 아시는가.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다.

“허일병 첫 총상때 생존”

부친, 부검기록 인용 주장

허원근(許元根·당시 21세) 일병 자살조작 은폐사건과 관련해 처음 총탄을 맞았을 때 생존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許永春·63)씨는 25일 “당시 부검의의 부검 기록에 따르면 사인(死因)은 ‘전두부(머리 앞쪽)의 총상으로 인한 대뇌의 파괴’였고 ‘좌우측 가슴 모두에 생활반응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생활반응은 살았을 때 나오는 것으로 ‘좌우측 가슴 생활반응’ 부검 결과는 허 일병이 처음 총탄을 맞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실탄을 쏘았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허씨는 주장했다.

허씨는 “당시 부검의가 ‘나는 사건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당시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당시 하사관으로부터 처음 오발탄을 맞았을 때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신빙성이 약해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허일병 첫 총격후 살아있었다”

9시간뒤 2차 총탄에 숨진듯

아버지 부검결과 토대 주장

1984년 군에서 의문사했던 허원근 일병(당시 22세)의 사망원인에 대한 당시 부검결과가 머리총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관에 의한 첫 오발 총격때는 허일병이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당시 부검결과가 이미 자살로 결정돼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허일병의 아버지 영춘씨(63)는 25일 “당시 부검기록에 따르면 사

인은 전두부(머리 앞쪽)의 총상으로 인한 대뇌의 파괴였고 좌·우측 가슴에 살았을 때만 나오는 생활반응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허일병이 처음 총탄을 맞고 9시간이 지난 뒤 다시 왼쪽 가슴과 머리에 실탄을 맞았으나 생활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허일병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총격을 받았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허씨는 주장했다.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허일병 사망' 현장 조사 의문사규명위, 새달 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5일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지조사를 다음달 2일 7사단 사건 현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지조사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조사관과 참고인을 포함해 규명위원회들과 아버지 허영춘씨 등 유가족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 일병을 쏜 것으로 알려진 모 예비역 하사관은 최근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져 실지조사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3)씨는 "부검의가 당시 '사건 현장에 가보지 못했다'고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규명위는 5공화국 시절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당시 이학봉 계엄사합수부 수사단장, 서정화 내무부장관에게 동행 명령장을 보내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노 전 대통령 등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許일병 첫총격때 살아있었다”

부친, 부검기록 근거로 제시

19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이 상관에 의한 첫 오발 총격 당시 생존해 있었으며, 응급조치 대신 사건 은폐를 위해 현장에서 추가로 총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3)씨는 25일 "당시 부검의의 기록에 따르면 사인은 '전두부(머리앞쪽)의 총상으로 인한 심한 대뇌의 파괴'였고, '좌우측 가슴 모두에 생활반응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같은 부검결과는 내 아들이 먼저 오른쪽 가슴에 총탄

을 맞고 9시간이 지난 뒤 다시 왼쪽 가슴과 머리에 실탄을 맞았음에도 살았을 때만 나오는 생활반응이 오른쪽 가슴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내 아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또 다시 총을 쏘았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중간 조사결과에서 '84년 4월2일 오전 2~4시쯤 허 일병이 하사관의 총기오발로 오른쪽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하자 군에서 허 일병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다시 왼쪽 가슴과 머리에 총을 쏘았다'고 발표했다.

이현택기자 larchide@sgt.co.kr

한국시론

이철학 전주고 인권총위 위원



BC 970년째 신혼이던 바빠바는 다섯 왕 수하의 군인인 남편 우리아의 전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다섯 왕이 바빠바와 혼인을 했다. 그 내막은 이렇다. 다섯 왕은 어느 날 예쁜 여인 바빠바에게 한눈에 반해 데려다 정을 통했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다섯 왕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 아내와 밤을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가장 처절한 전장으로 보내 전사하게 만든 것이다.(성경 사무엘 하 11장 참조)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흘러 허 일병의 아버지는 이제 63세가 되었다. 아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뛰어다니는 세월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긴 시간이었다. 이번 발표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타살도 자살로 뒤바

진실 은폐속에 고통받는 유족

1984년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에 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는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술 취한 상관이 쓴 총에 가슴을 맞은 숨진 상태에서 이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두 발을 더 쏘았고 이를 자살로 몰아갔다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반인권적 폭거였다.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더욱 큰 문제는 군에 간 젊은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는 지극히 죽음을 당하고 있고 허 일병의 부모처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은 눈멀이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의 압축기였던 80년대는 매년 1000여명이,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최근에도 300여명이 죽어가고 있다.

전주고인권위 군의문사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에 이란 가슴아픈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유가족들과 함께 지

하기 위해 군에 간 건강한 청년이 사망했더라도 이유가 어쨌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망자와 사망자의 유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군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관·군 함께 의문死 조사

또 군에서 주장하는 자살이라는 결론에 대한 입증책임은 군에서 지도록 해야 한다. 허 일병의 사건도 현병대가 조사를 했고, 육군 범죄수사단에 고발까지 했지만 기각됐다. 현장과 목격자, 수사단, 참고인, 각종 사건관련 증거들이 모두 군대 내에 있는데도, 유족의 현장접근을 막고 현장과 시체 사진에 대한 촬영을 불허하고 수사기록 열람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살이 아님을 유족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에서만 가능한 주장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모든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허 일병 사건에서 보듯 군만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조사단으로는 결코 진실규명을 할 수 없으며 유족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다. 과거 병역비리조사단처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軍, 명예회복을 위하여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던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거의 20년간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뛰어다닐 때 우리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하급자 때는 폭력의 피해자였다가 고참이 되면 기해자가 되는 현실 속에서 군대 많이 좋아졌다며 반인권적인 군 생활을 추어치러 버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앞으로 허 일병과 같은 억울한

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다. 석연치 않은 자식의 죽음을 부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전주고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군에서는 아직도 사명사고기 발생하면 '타살의 혐의가 없으므로 자살'이라는 편에 박힌 결론을 위압적인 자세로 유족들에게 수용하려고 한다.

이제 국가와 군 당국은 실추된 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방의 의무를 다

“許일병 死因은 추가총격”

확인사살 가능성 제기 특조단, 조작목인 의혹

1984년 하사관이 쓴 총에 맞아 숨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허 일병의 직접사인이 머리 총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허 일병이 처음 오른쪽 가슴에 총격을 당한 뒤 살이 있는 상태에서 추후 총격을 받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허 일병 부검 기록에는 직접 사인이 '전두부(머리 앞쪽)의 총상'으로 인한 심한 대뇌의 파괴'로 돼 있고 좌우측 가슴에 총격을 당했을 때 살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생활 반응'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이 같은 부검결과는 '하사관이 우

발적으로 쓴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사망한 뒤 자살 위장을 위해 두 발을 더 쫓았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중간 조사와 달리 실제로는 처음 총탄을 맞고도 생존해 있던 허 일병이 '확인사살'당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000년 3월17일자 국방일보 보도 내용도 허 일병의 부검을 담당한 군의관이 "가슴의 총상은 즉사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에 따라 나중에 허 일병에 총을 쏜 당사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99년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를 받았던 사병이 "당시 특조단 조사관(중사)

이 목격 사병 4명을 불러 84년 헌병대에서 사인이 자살로 작성된 진술서를 보여주며 '이 진술을 그대로 하라'고 종용해 이를 따랐다"고 최근 털어놓음에 따라 특조단이 허 일병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육군 7사단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허일병사건 의혹과 군 특별조사>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1984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27일부터 본격화된다.

사망 당시인 84년부터 95년까지 육군은 모두 5차례의 민원을 접수, 그때마다 육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최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국방부의 특별조사에서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처벌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7사단 헌병대 수사결과 = 사망한 지 4주가 지난 뒤 작성된 84년 4월 30일 7사단 헌병대의 수사결과는 허 일병이 M16을 이용,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수사결과에 따르면, 허 일병은 84년 4월2일 오후 1시20분께 중대본부에서 남쪽으로 약 30m 떨어진 폐유류고 나무울타리 옆에서 3발의 총알을 맞고 숨진채로 밭을 타러 가던 중대본부 요원 2명에 의해 발견됐다는 것이다.

7사단 헌병대는 당시 수사를 통해 허 일병이 M16소총을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에, 두번째는 왼쪽 가슴에 밀착, 자살을 시도했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함으로써 '두개골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결과는 또 허 일병이 자살을 결심한 동기를 '소속 중대장의 이상성격에 의한 폭사를 비관했다'고 결론지었고, 자살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84년 4월2일 오전 중대장이 철책근무 순찰을 나가는 시간을 기회로 15발들이 탄창 2개를 훔치고 자신의 지급총기 M16소총을 휴대하고 내무반을 빠져 나갔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7사단 헌병대 수사결과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당시 수사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후에도 84년 2군단 헌병대 수사, 육군 범죄수사단 수사 등에서도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96년 국민고충처리위에서 국방부에 재조사 권고안을 제출했으나 국방부의 반응이 없었고 99년 이후 국방부의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가 진행되던 중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지되고, 의문사진상규명위로 넘겨졌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사건 재구성 = 허 일병은 사건 당일인 84년 4월2일 오전 2~4시께 한 초소장의 긴급축하를 위해 중대본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소속 중대장이 '라면 맛이 없다'고 '모 하사관을 질책하자, 그 하사관이 만취상태에서 중대본부를 나와 자신의 M16소총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허 일병을 향해 우발적으로 발사, 허 일병은 오른쪽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고, 곧 이어 허 일병의 주검을 향해 2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당시 목격사병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밝히고 있다.

◇ 제기된 의혹 = 허 일병 사망 당시 중대본부에서 술마신 중대간부 이외에도, 중대본부 주변과 인근 내무반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이 목격했다는 것.

중대간부들은 근무지 이탈 및 술자리에 대한 문책이 우려되자 허 일병이 낮시간대에 자살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고, 이어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사고직후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대급 간부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또 군 헌병대의 조사때 목격한 사병들을 상대로 무릎에 곤봉끼우고 짓밟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조사후 포상휴가가 주어졌을 뿐아니

라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조작 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특별교육이 있었다.

특히 허 일병이 첫 발을 맞고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곧 이어 2발을 더 쏜 대목도 공포 분위기' 조성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허 일병에게 총을 발사한 하사관의 경우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않고 사단내 다른 중대로 전보된 뒤 진급해 90년초 상사로 예편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건 당일 오전 2~4시께 대대급 간부까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자살로 처리하기로 했고, 오전 7시께 연대에 '자살사건'으로 보고된데 이어 오전중 사단단위까지 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건발생 시간이 '오후 1시20분'으로 처리된 수사결과에 대해 연대와 사단 어느 곳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상급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국방부 특별조사위 구성과 전망 =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정수성 육군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군 수사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법의학 등 관련 사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나아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벌써부터 군 일각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대로 이 사건의 조작 및 은폐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일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거나 허위조작에 가담했던 인원들은 모두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 진상규명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자살조작 및 18년간 은폐'라는 진상이 밝혀질 경우 문제의 하사관과 중대장 등 사건 관련자들과 대책회의에 참가했던 군 간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살로 결론지은 군 수사관계자들이 처벌대상이 될 전망이다.

lye@yna.co.kr

(끝)

'허일병 자살조작.은폐' 국방부 특별조사

의혹 철저조사, 가담자들 상응하는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군의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난 1984년 4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27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성 육군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수사전문가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되,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등 관련 분야 사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허 일병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은 군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땅한 책무이며 도리"라며 "국방부는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힘으로써 일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변인은 "군이 허 일병 사건의 진상을 18년간 은폐해 왔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거나 허위조작에 가담했던 인원들은 모두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육군은 사건이 발생했던 84년부터 95년까지 5차례의 민원을 접수, 그때마다 조사를 벌여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 피살위 사병대 상 알리바이·증거조작 교육 ▲ 목격사병 조사시 가혹행위 ▲ 목격사병 조사후 휴가 ▲ 허 일병 쏜 하사관이 징계받지 않은 점 ▲ 사단 단위까지 보고 등을 들어 자살조작 및 은폐 행위에 상급부대를 포함한 군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1983년 부산 수산대 3학년때 강제징집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84년 4월2일 오전 2~4시께 중대본부에서 한 초소장의 진급축하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한 하사관이 쏜 M16 소총의 총알을 오른쪽 가슴에 맞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밝혔다.

lye@yna.co.kr

(끝)

<한성동 국방부 합조단부단장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국방부는 26일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84년 사건 당시 정황과 자살로 결론지은 근거,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 한성동(대령) 합조단 부단장, 박주근(대령) 합조단 기획부장, 당시 7사단 헌병대 수사관이었던 김주영(현재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준위 등이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사건 직후 타살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다.

▲(한 부단장) 병사들의 진술 시간대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처음에는 타살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타살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법의학적 소견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지었다.

—조사에 참여했던 군의관들이 어떤 진술을 했다.

▲(한 부단장) 사단본부에서 사체를 부검했다. 군의관들은 문서상으로 부검 결과를 보고한다. 부검 소견서는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있다.

—군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 일병이 좌우 가슴에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M16은 총신이 긴데 스스로 가슴 부위에 쓸 수 있나.

▲(한 부단장) 80년대 이후 복부나 가슴을 먼저 쏘고 머리를 쏘는 자살 사건이 4건 있었다. 허 일병의 경우 총탄이 심장과 간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 머리에 대고 다시 쓸 수 있었다고 군의관이 판단했다. (박 기획부장) 숨진 허 일병의 키가 175cm 정도다. 유사 상황으로 실현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일병의 사망 추정 시간은

▲(김 준위) 오전 9시로 추정됐다. 아침밥을 먹은 상태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 부검기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허 일병을 쏜 것으로 발표된 모 부사관은 수사하지 않았나, 이후 가족들의 민원 사항에 해당 부사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나.

▲(김 준위) 해당 부사관이 관련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민원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나.

▲(황 대변인) 협조하지 않은 적 없다. 모든 관련 자료가 그곳으로 넘어가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가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전에 국방부와 상의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다.

—만약 타살로 결론나면 군이 조사결과를 번복하게 되는데,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나.

▲(한 부단장) 군 검찰 뿐 아니라 법의학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사건 은폐, 조작에 가담한 모든 민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한가.

▲(황 대변인)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 부단장) 사건과 관련된 전역자들도 군에서 조사할 수 있다.

leess@yna.co.kr

(끝)

'허일병 사망' 민-관 합동조사

국방부 오늘부터...법의학자등 참여 특위 구성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육군 제7사단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27일부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 검찰 및 헌병 이외에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정수성 육군중장)를 구성해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허 일병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군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땅한 책무이며 도리"라며 "과거 김훈 중위 타살의혹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방부는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힘으로써 일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1984년 4월2일 오전 2~4시께 중대본부에서 열린 초소장의 진급 축하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

한 채 행패를 부리던 한 하사관이 쓴 엽16 소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84년부터 95년까지 5차례의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했으나 △3발 총격이 밀착사격됐으며 △가슴에 2발을 맞았을 때 근육수축 현상이 일어나 허 일병이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실탄 3발이 모두 허 일병의 소총에서 난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지은 바 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국방부의 특별조사 방침에 대해 "이 특별조사기구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훈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특별조사위 구성키로

국방부, 각종 의혹 재조사

국방부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은폐 의혹을 제기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의돈(黃義敦·육군준장) 국방부 대변인은 "정수성(鄭壽星·육군중장) 1군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그동안 제기한 각종 의혹을 27일부터 재조사할 것"이라며 "자살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26일 말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는 군 수사전문가로 구성하되, 법의학 관련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를 받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허일병 사망규명

국방부 조사착수

최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4년 발생한 허원근(許元根·당시 21세) 일병의 사망사고에 대해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방부가 27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6일 1군부사령관인 정수성(鄭壽星) 육군중장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법의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허일병 사건' 재조사 착수

국방부, 특별조사위 구성

국방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자살 은폐의혹을 제기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26일 "정수

성 육군 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허일병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진상을 은폐했거나 허위조작에 가담했던 모든 인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성동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대령)은 허일병 사망시간과 관련, "군 조사시 오전 9시50분쯤 사망한 것으로 나왔으며 조사 당시에는 오전 2~4시쯤 사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최현수기자 hschoi@kmib.co.kr

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한나라당 김원웅,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어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어제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수지김 사건' '허원근 일병 사망조작사건' 등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 은폐한 사건이 공소시효(1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공권력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타파되지 않은 탓에 반인륜적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건의안 제출과 인권위 토론회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단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경우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한편,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이 지적했듯이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한 1968년의 유엔협약이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제한한 법률을 폐기토록 한 1993년의 빈 인권선언문을 수용하면 해결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강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틀과 방향만 제대로 정립되어도 특별법 제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軍 '허일병 사망' 진상규명 착수

국방부 '특별조사위' 구성

국방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지난 1984년 부사관이 쓴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최근 밝혀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단장 정수성 중장)를 만들어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수사를 통해 타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대로 군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수사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되,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교수,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협조를 받기로 했다.

특별조사위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있는 사건

관련자들도 모두 소환, 진상을 은폐했거나 허위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특별조사위는 육군측이 지난 84년부터 95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해 재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허일병 사망을 자살로 결론지은 경위에 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허 일병 사망사건에 관한 의문사위의 발표는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군에도 큰 충격을 줬다."면서 "철저히 조사를 통해 일말의 의혹도 없도록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사건 은폐·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오석영기자 palbati@kdaily.com

첫총격 지목 하사관 "許일병 내가 안봤다"

의문사진상조사委 "거짓말... 입증 가능"

하사관 "당시정황 증언 의문사조사서 목살" 주장

군당국의 자살발표와 달리 타살됐다고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허원근일병 사건과 관련, 허일병을 우발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의문사위가 지목한 당시 하사관 A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A씨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다"며 그를 타살자로 단정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다음달 10일 이 사건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26일 저녁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허일병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허일병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허일병을 죽였다면 왜 (군 수사기관에서) 약식조사만 받고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겠느냐"며 "술자리 시점과 사고 상황 등이 내 기억과 다른데도 의문사위는 내

주장을 목살했다"고 말했다.

A씨는 'A씨가 부대 회식도중 허일병을 죽였다'는 의문사위 중간 조사결과를 일절 부인했다. 회식날짜부터 의문사위와 하루나 차이가 난다. A씨는 "중대장 주재하에 술자리가 벌어진 것은 1984년 3월 31일 자정무렵으로, 4월 1일 새벽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4월 1일 자정부터 2일 새벽까지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밝혔었다.

허일병의 시신은 2일 오전 부대 폐유류 창고에서 발견됐다. 의문사위는 회식도중 허일병이 죽었고, 근무지 이탈·회식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급부대가 개입해 폐유류 창고에서 허일병에게 2발을 더 쏘아 자살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4월 2일 오후 2시 쯤 중대본부에서 떨어진 19소초 수

문공사를 하다가 중대장으로 부터 '누가 죽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허일병이 폐유류고 쪽에 숨겨 있었다"며 "사건이 다 벌어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중대장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고, 나도 '중대장이 죽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시나리오가) 딱 짜여있는데 말해 뭐하겠느냐"며 입을 다물었다. 해당 중대장은 98년 무렵 변사체로 발견돼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의문사위는 27일 "허일병 유족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A씨를 설득해 왔을 뿐"이라며 "A씨가 4월 2일 회식도중 술에 취해 총으로 허일병을 쏘았다는 내용의 진술과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녹화사업 중요자료 소각”
의문사위에 촬영사진 제출
前기무사간부 잠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녹화사업’ 관련, 기택 실지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했던 기무사 전 간부가 관련자료를 모두 소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1982년 당시 보안사령부 심사와 과장이었던 서의남씨를 소환, 개인적으로 보관중이던 중요 관련자료를 확인했으나, 서씨가 지난 20일 이를 완전 소각했다고 밝혀왔다”면서 “서씨는 이어 21일 재소환 당시 소각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씨 집에 대해 재차 방문조사에 나섰지만 서씨가 전날 오후부터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실지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황현택기자

88년 의문死 오범근씨
민주화운동관련성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8년 의문사한 후지카 대원전기 직원 오범근(당시 37살·사진)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 결정문 작성과 심의를 추진키로 26일 결정했다. 이는 규명위의 조사 결과, 오씨의 죽음이 ▲자살의 정황이 농후하며 ▲민주화 운동보다는 생존권 투쟁이고 ▲공권력의 간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키로 한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許일병 죽음’ 진실 밝혀질까

국방부 특별수사 착수

자살조작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뒤늦게 특별조사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이번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허 일병 사망 당시인 1884년부터 95년까지 다섯차례 민원을 접수, 수사를 벌여 모두 자살로 결론지은 육군의 결정을 번복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주장한 자살조작과 은폐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 낼 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최근 허 일병 사망 당일인 4월2일 오전 2~4시쯤 초소장의 진급속하를 위해 중대본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소속 중대장이 “라면 맛이 없다”고 모 하사관을 질책하자 그 하사관이 만취상태에서 중대

마신 중대간부와 내무반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의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제기한 중대 간부들이 근무지 이탈과 술자리에 대한 문책이 우려되자 허 일병이 낮시간대에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고 대책회의에서는 대대급 간부들까지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상급부대 조직적 개입의혹등 집중조사
軍 ‘자살결론’뒤집을 단서 캐낼지 관심

본부를 나와 자신의 M16소총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쏜 숨지게 했으며 추가로 2발을 더 발사한 사실을 목격 사병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허 일병 사망 당시 중대본부에서 술을

여기에 ▲군 헌병대 조사 때 목격 사병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조사 후 목격 사병들에게 포상휴가를 준 이유 ▲허 일병에게 총을 쏜 하사관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상급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 등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진기자 worldpk@sgt.co.kr

軍, ‘許일병’ 특별조사

“조작 확인면 관련자 엄벌”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군의 자살조작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뒤늦게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관련기사 21면)

국방부는 26일 정수성 육군 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27일 구성한 뒤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 허 일병 자살 조작과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강력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진기자 worldpk@sgt.co.kr

국방부 許일병사건 특별조사

특조위 구성... 민간인도 참여

국방부는 26일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허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정수성(鄭壽星·육군 중장) 1군 부사령관

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9면

국방부는 특별조사위를 검찰과 헌병 수사관계자로 구성하되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등 관련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의문사위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허 일병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군의 미망한 책무이며 도리”라며 “조사결과,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은 모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건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15년을 넘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인권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인권위, 인권유린 범죄자 방패막으로 악용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 등을 통해 공소시효만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인권위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최근 허원근 일병의 군부대 내 살인사건과 관련한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런 제도적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법 적대적 의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며 국내 법에도 시효부적용의 원칙이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또 특별법의 제

정을 위해 하루 빨리 법무부 내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인도적범죄등에관한특별법 제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금지 원칙간의 충돌 논란과 관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정지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급효금지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역류현상이 계속되어 법질서 자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운동과 관련 “특별법 적용 범위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법적용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용 기자 ysy@laborw.com

국방부 허일병사건 특별조사 착수

“조작·은폐 사실 드러나면 관련자 강력처벌”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군의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난 1984년 4월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27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성 육군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수사전문가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되,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등 관련 분야 사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허일병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은 군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땅한 책무이며 도리”라며 “군이 허일병 사건의 진상을 18년간 은폐해 왔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거나 허위조작에 가담했던 인원들은 모두 이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육군은 사건이 발생했던 84년부터 95년까지 5차례의 민원을 접수, 그때마다 조사를 벌여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

는 △피살 뒤 사병대상 알리바이 증거조작 교육 △목격사병 조사후 휴가 △허일병 쓴 하사관이 징계받지 않은 점 △사단 단위까지 보고 등을 들어 자살조작 및 은폐 행위에 상급부대를 포함한 군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1983년 부산 수산대 3학년때 강제징집 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 복무하던 허일병은 84년 4월2일 오전2~4시께 중대본부에서 한 초소장의 진급 축하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한 하사관이 쏜 M16 소총의 총알을 오른쪽 가슴에 맞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밝혔다.

/법



Military to Reinvestigate Army Private's Death

By Sohn Suk-joo
Staff Reporter

Amid mounting criticism over the military's alleged cover-up of the cause of a soldier's death, the Defense Ministry said yesterday that it would reopen the case to get to the bottom of the suspicious death.

A special committee led by Lt. Gen. Chong Su-song will embark on a re-investigation of the 1984 death of Army Pvt. Ho Won-gun today, to determine whether his death was disguised as a suicide by his superiors, said a senior military investigator.

"From the beginning, we harbored suspicions that Ho might have been murdered because soldiers made conflicting statements at the time," said Army Col. Han Seung-dong, deputy commander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But we had to conclude that it was a suici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orensic examination as there wa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he was murdered."

If Ho's death was fabricated as a suicide as claimed by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the ministry

said that it would explore ways to punish those involved although the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case had already expired.

"If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 finds that Ho did not commit suicide, we will mete out due punishment to all involved in the cover-up," said Brig. Gen. Hwang Eui-don, spokesman for the ministry. But he did not elaborate, only saying that the ministry is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proposing a special law.

The move came less than a week aft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said in an interim report that Ho was shot and killed by a drunk non-commissioned officer at a party celebrating the promotion of a commander.

In contrast, five previous rounds of military investigation showed that Ho committed suicide by shooting himself three times out of despair over his commander's cruel treatment.

"It's our obligation to get to the bottom of the allegations related to Ho," Hwang said. "The ministry will do its utmost to clear every single suspicion about the case."

ssj@koreatimes.co.kr



Army Col. Han Seung-dong, deputy commander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gives a briefing at the Defense Ministry, Monday, about the military's alleged cover-up of the cause of the death of a soldier in 1984. Yonhap



울부짖는 어머니들 27일 낮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대회에 참석한 고 송상훈 이병과 박성식 일병의 어머니(왼쪽부터)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라"며 울부짖고 있다. 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모든 군의문사 민-관 합동조사를”

군가협 빚속 “남편·아들 죽음 밝혀달라”

“국방부 특조단 재조사도 엉터리” 울분

백발이 희끗한 아내는 젊은 남편의 장교 임관 사진을 부여안은 채 국방부를 향해 절규하고 있었다.

늦여름 비가 흠뻑리던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주최로 열린 '군의문사 전면조사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나선 변진구(63·강원도 춘천시)씨의 눈물에는 33년 한이 서려 있다. 그는 지난 1969년 어느날, 육군 준위였던 남편이 '가슴에 총을 쏘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시신조차 인수받지 못했고, 남편은 군부대에 그대로 매장됐다. 지난해에야 남편의 묘를 자신이 사는 춘천으로 이장할 수 있었다. 이날 변씨의 옆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20여명의 어머니들이

저마다 군의문사한 아들의 사진을 부여잡고 "내 아들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통곡하고 있었다.

최근 의문사규명위원회가 지난 84년 자살로 종결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발표하자,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문사와 관련해 지난 99년 4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해 2001년 10월까지 사망사고 민원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접수된 166건의 민원 중 회송, 이첩된 5건을 제외한 161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자살에서 타살 등으로 사망원인이 바뀐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특조단 조사를 받은 변씨는

"남편의 매·화장 보고서 조작 증언이 확보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조단은 서둘러 자살로 결론지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는 "국방부 특조단은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줄곧 자살로 얘기해 왔다"며 "국방부가 군의문사와 관련해 민관 합동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9년 군에서 숨진 아들 이지명 하사의 어머니 김봉임(49·강원도 철원군)씨도 "9월13일이면 아들을 육군병원 병장고 안에 가둬둔 지 꼭 3년째"라며 "민관이 함께 한 번만 제대로 재조사를 해보면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특조단 재조사 때 이미 유족들을 참여시켰다"며 "허 일병 특조단을 확대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를 방문. 고 허원근 일병 아버지(오른쪽) 등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全基炳기자 gibong@chosun.com

“의문死 규명 시한 연장 노력”

盧후보, 허일병 부친등 유가족 20여명 만나

신당 창당 논의가 소강국면에 들어 서면서 ‘정책투어’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아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는 있으나 진상규명의 시효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상관들에 의한 타살 및 조직적 은폐’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허원근 일병의 부친 허영춘씨 등 유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노 후보는 오는 9월 16일이 법적활동 시한인 의문사진상조사위의 시한 연장, 조사권한 강화 등의 건의를 받고 “의원들과 상의해 진상조사위 설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

지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80년 이후 군부대 사망자가 8000명이 넘고 그 중 자살처리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자살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辛貞錄기자 jrshin@chosun.com

“회식자리 싸움·총기사고 없었다”

許일병 부대원 9명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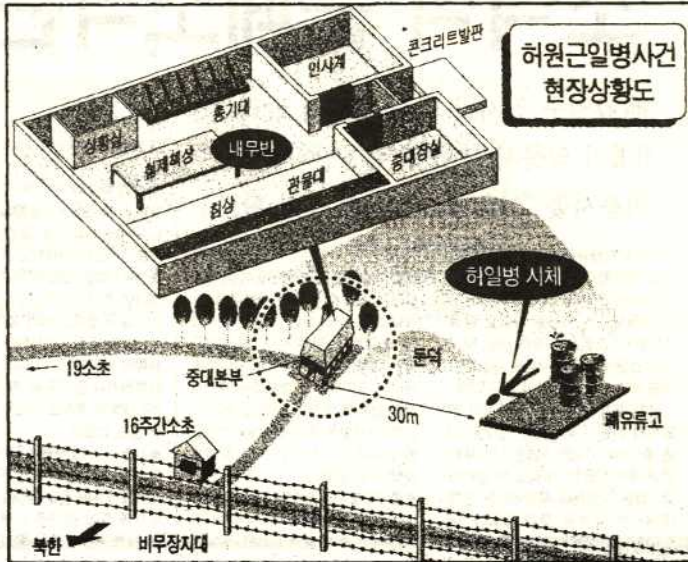
허원근 일병이 사망할 당시, 사건 부대에서 근무한 장교 및 사병 13명은 작년 7월부터 의문사위에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 중 9명을 인터뷰했다.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은 증언 요지.

▲장모 중위(현재 D정보산업고 교사·ROTC 출신으로 진급 축하연의 주인공)=중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나, 노 중사 등 3명이 회식을 했으며 허 일병은 내무반에서 대기하다 부르면 와서 시중을 들었다. 싸움은 없었으며 오전 2시30분쯤 소초로 돌아갔다. 난 사실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의문사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는 줄 알고 의문사위가 ‘약자 편에 서는 분이 사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내 입장은 명확하다.

▲노모 중사=총을 쏜 적이 없다. 밤 11시30분쯤 시작한 회식은 오전 3시 이전에 끝났고 당시 내가 근무하던 19소초의 한 사병과 함께 노래까지 불러가며 소초로 돌아갔다.

▲이모 하사(19소초 근무)=나는 밤에 근무지로 나가 있어서 상황을 전혀 모르겠다. 다음날 점심을 타러 가다 허 일병이 숨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모 병장(신협 상무)=헌병대서 3~4일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후 10일 정도는 책도 보고 별 타치가 없었다. 그 때 진술한 게 제일 정확할 것이다. 헌병대 조사 후 휴가를 간 적도 없다. 2일 아침에 허 일병을 본 것 같다.



“헌병대 조사 받은후 포상휴가간적 없어” “사망했다던 시점에 허일병과 같이 있어”

지 기억이 없다. 밤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중대원 집합시에 허 일병이 같이 있었다. 허 일병의 휴가 예정일 전날이었다. 의문사위는 노 중사가 사건 직후 바로 전출을 갔다고 했지만 내가 제대할 때까지 한참 동안 계속 부대에서 근무했다.

▲송모 병장(16소초 상황병)=야간에는 초소에서 잤다. 오전 10시쯤 총소리 2발을 들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봤을 때 자살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모 상병(운수업·상황병)=신상병과 같은 생각이다. 내가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하는 한에서는 내무반 총기사고 같은 것은 없었다.

▲손모 상병(U화성 대표이사·병기병)=점심을 먹기 전에 이 하사가

나타나 “누가 죽었다”고 했다. 현장에 가보니 탄창에서 3발이 나갔는데 탄피는 2개밖에 없어 보관하고 있던 실탄 1발을 땅에 묻어두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사단 헌병대에 발각돼 혹독하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나와 오 병장이 시체를 들고 나갔다고 의문사위에서 추궁했는데 말도 안 된다.

▲권모 이병(자동차 부품 도매업·소초원)=오전 11시가 다 되어 사고가 났으며, 현장에 온 중대장은 상부 보고가 늦으면 곤란하니 총소리를 들은 시점을 허 일병을 발견한 시점과 비슷하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당일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들롱이 나 혹독하게 조사를 받았다.

/廉康洙기자 ksyoum@chosun.com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허원근일병 사망당시 부대원들

“조직적 은폐조작은 없었다”

“他殺일수 있지만 당시 정황과 달라” 9명이 의문사조사 발표 정면반박 논란 의문사조사 “1명 이상 확실한 증언 확보”

의문사조사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지난 84년 군복무 중 숨진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군에서 조직적으로 타살을 자살로 은폐 조작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부대원 대부분이 이를 정면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팀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신원이 확인되는 부대원 13명 중 연락 가능한 9명을 인터뷰한 결과, 부대원들은 “우리가 허 일병이 총 3발을 맞았는데 자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의문사위 발표 내용은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르며 우리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것처럼 진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의문사위측은 지난 2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1명 이상의 사병으로부터 확실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1주일간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의문사위 발표와는 진상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술자리서 싸움 있었나=의문사위는 장 모 중위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84년 4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중대막사에서 중대간부들이 참석한 진급 축하 술자리가 있었고,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일어나 한 하사관이 행정반으로 뒤처나와 사병들을 화물이 대상으로 삼아 총을 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발표했다.

의문사위가 총을 쓴 당사자로 지목한 노도 중사는 “중대장(대위·99

년 사망)의 제안으로 밤 11시30분쯤부터 나와 장 중위 등 3명이 중대장실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다. 다음날 오전 2시30분쯤 기본종결 끝났다”고 말했다. 장 중위도 “허 일병은 당시 내무반에 대기하면서 술안주를 날라다 주었다”며 “술자리는 오전 2시를 전후해 아무일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사병들 중의 상당수는 “그날 밤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총기오발사고 있었나=의문사위는 노 중사가 허 일병에게 죽인다고 함을 치는 순간 총이 발사돼 허 일병

이 4월 2일 오전 2~4시 사이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그 근거로 “대대 및 연대 상황실이 오전 4~6시 중대로부터 유선으로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당시 상황별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반에 있었던 신모 상병은 “총소리는 커녕 노 중사가 행패를 부린 적도 없었다”며 “사고가 있었다면 20명 남짓한 막사 안에서 총소리를 못들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오모 병장은 “실탄이 발사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가 인터뷰하거나 증언을 들 한 9명 중 4월 2일 새벽에 총상을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건 은폐·조작했나=의문사위는 2일 새벽 대대장이 사건 현장에 있던 10여명의 사병들을 상대로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 조작을 위한 역할분담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

혔다. 또 사건 현장에 있던 중대 간부들과 3~4명의 사병들은 내무반을 청소하고 오전 10시쯤 허 일병의 시체를 내무반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로 옮긴 뒤 다시 왼쪽 가슴과 머리를 총으로 쏘아 자살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대원들의 증언은 4월 2일 오전 10~11시 사이 2말의 총성이 들렸다는 대목에선 대부분 일치했다. 그러나 사건 은폐 행위는 모두 부인했다. 신 상병은 “오전 9시 전후 집합 때 허 일병은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손모 상병은 “그날 내무반을 청소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전체 상황을 말해 준 증언자는 분명히 있다”며 “종합 조사결과 발표 때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慶南記者 ksyoun@chosun.com
／安陽地기자 agon@chosun.com



◇기습호우에 주차장 물바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탄천주차장이 중부지방에 내린 김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자, 관광버스 회사 직원들이 이곳에 세워두었던 버스를 맞물로 유어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慶南記者 choish@chosun.com

“86년 서울대생 김성수씨 의사前 뇌손상” 의문사조사, 타살 가능성 제기

의문사조사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지난 86년 6월 22일 부산 송도 앞바다 매립지 공사장에서 돌에 시엔트 담이 매달린 채 번사체로 발견된 서울대생 김성수(당시 나이 20세)씨가 당시 김·경의 발표와 달리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서울대 지리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6월 18일 오전 하숙집에서 전라도 말씨를 쓰는

4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지 4일 만에 의사체로 발견됐으며, 김·경은 “김씨가 사회부적응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타살 가능성의 근거로 “김씨가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뇌손상을 입었으며 돌에 난 상처도 의사 전에 생긴 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당시 부검의 손모씨의 부검재감정서를 공개했다.

／安陽地기자 agon@chosun.com

“許일병 내가 안쫓다”

‘오발’지목 하사관 부인...의문사조사 “증거 확보”

1984년 군에서 의문사조사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의문사조사규명위원회가 허일병이 모 하사관의 소총으로 발로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범인으로 시목된 이 하사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최종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지난 20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에서 84년 4월 2일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병영 안에서 오전 2~4시쯤 중대 간부의 진급 축하 회식 자리에서 모 하사관이 술에 취해 무발적으로 사살했으며 이를 자살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문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하사관은 조사에서 시목된 “허일병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허일병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관계자는 “그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그가 사건 당일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총으로 허일병을 쫓다”는 진술과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 하사관은 27일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는 말만을 한 채 전화를 끊었다. 안홍욱기자

허원근일병 母校서 명예졸업장

군복무 중 총탄에 맞아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18년간 자살로 은폐돼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허원근 일병이 모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 부경대는 27일 “해양공학과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허 일병에 대해 명예졸업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부경대 관계자는 “과거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

여한 전례가 있듯 국가를 위해 군복무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허 일병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허일병 아버지 영춘(63)씨는 이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이철주/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984년 군 복무중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허 일병이 자신의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머리 등에 세 발의 총을 쏘아 자살했다는 18년 전 군 당국의 발표와 달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중대 선임하사의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

더욱 기막힌 부분은 당시 군 간부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긴 과정이다. 사건을 보고받은 군 간부들은 대책을 숙의한 끝에 주검을 옮기고 다시 두 발의 총격을 가해 자살로 위장했으며, 허 일병의 알리바이까지 치밀하게 조작했다. 심지어 사고현장을 목격 한 사병들을 헌병대로 끌고 가 보름 동안의 가혹행위를 통해 입막음까지 했다고 한다. 너무 엄청난 소스라칠 일이다.

수사권한도 없이 검찰, 국정원, 기사사 등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도 영원히 의문으로 남게 됐을 것이다. 이창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 여력이 들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가능하도록 현행 사법제도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2002년 5월 발표), 수지진 간첩조작 사건(2001년 12월 발표), 정승교도소 박영두 교문차사 사건(2001년 6월 발표) 등 최근 1년 여 사이 밝혀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도 우리는 가해자 중 아무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교도소, 검찰 등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사건의 조작과 은폐에 개입한 탓에, 진실이 규명되기까지 짧게는 15년, 길게는 30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밝힌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등 최근 1년여 사이 밝혀진 인권침해 사건에서 우리는 가해자 중 아무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했다.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통식이 유지되는 한,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다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가해자들의 공소시효는 모조리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자신의 범죄를 숨겼던 가해자들이 숨숨장구하고 심지어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버젓이 공직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무력감과 정의의 상실감을 느낄 뿐이다. 게다가 공소시효라는 방패막이는 진실을 밝혀내는 데도 걸림돌이 돼 왔다. 사법기관이 '소추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입을 열기란 쇠심줄을 끊어내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부조리 현상을 바로잡고 자 올래 초 인권단체들은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일변 청원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고문·살해하고, 그러한 사실을 조작·은폐한 행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와 인권을 보장해 온 세계 각국에서도 이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정립해 왔다. 독일 국민들은 2차대전 당시 자행됐던 나치의 범죄를 청산하는 데 '공소시효'가 걸림돌로 등장하

지, 두 차례나 형법을 개정한 끝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아예 없앴다. 그뿐만 아니라,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 부작용 조약'과 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규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작용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만이 바람직한 오늘과 미래의 초석임을 일찌감치 깨달은 결과다. 우리도 95년 '5·18 내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쟁범죄 파괴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대상을 반인도적 국가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통식이 유지되는 한,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진실만 밝힌다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허 일병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자못 숙연케 한다. 나 또한 '진실 앞에 속죄'하는 가해자들에게 무죄판결의 원칙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공소시효라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는 한, 유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 '용서할 권한'조차 없다.

'허일병 사망' 물음표-재반박 논란

노증사 "총 안샐다"·일부 중대원 "총기사고 없어"
 의문사규명위 "총기발사 근접목격 2명 진술 확보"
 당시 소초장 "3곳에 맞았는데 2발만 격발돼 의아"

지난 1984년 타살됐으나 자살로 조작·은폐된 것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당사자인 노증사(90년 전역)를 포함한 당시 부대원들의 부인 내용을 보도하자, 의문사위가 28일 이를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증사는 의문사위의 발표내용이 보도된 뒤, 일부 언론을 통해 "나는 총을 쏜 적이 없고, 그날 술자리는 오전 2시30분께 기분 좋게 끝났다"며 위원회 조사 내용을 부인했다. 또 <조선일보>는 28일치 신문을 통해 "당시 부대원 9명이 '총기사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의문사위는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부대원들 가운데 현장을 목격했다고 위원회에서 증언한 사람 2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증사는 위원회의 거듭된 조사에서 "당시 삽탄한 총을 총기대에 세워 두었다. (술자리에서 욕신각

신하는 상황에서) 내가 총을 집어 든 것 같다. 그때 중대장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 나를 뒤에서 껴안았다. 아마 총을 장탄해 위협할 때 뒤에서 껴안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오발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허 일병이 노증사의 총에서 격발된 총탄을 오른쪽 가슴에 맞고 중대장실 벽으로 쓰러졌으며, 쓰러진 허 일병을 모포로 덮어놓았다는 근접목격자 2명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가슴에 총을 맞은 허 일병이 숨진 뒤 가슴과 머리에 추가로 두 발을 더 맞았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군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총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생활반응'(근육수축작용)이 두 군데 가슴총상에서 모두 나타났다는 부검의의 기록을 근거로 세번째 총탄을 맞기 직전까지 허 일병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소초장이었던

장이무개 중위는 28일 오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오전 10시께 두 발의 총성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허 일병이 숨져있었다"며 "몸에 세 발의 총구가 있었으나, 옆에 있던 허 일병의 총에는 두 발만이 격발된 것을 확인하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규명위가 갖고있는 당시 헌병대 수사서류에도 이 부분은 '의문점'으로 기록돼 있다. 장 중위는 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규명위 발표를 부인하는 말은 한 적이 없고, 다만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전 1시 30분께 소초로 돌아가 이후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당시 회식때 중대장이 노증사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등 의견충돌이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허 일병을 향해 발사된 새벽 총소리가 인근부대에 들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조사"에서 여러 차례 총기를 발사하고 소리를 실렘했다. 현장은 낮은 구릉지대여서 총성이 멀리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27일 위원회의 마지막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활동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의문사첩서 진술 왜곡”

盧중사, 본지와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許일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盧모(54)씨는 28일 밤 본지 기자와 만나 “나는 절대 許일병을 죽이지 않았으며, 의문사위가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경기도 평택시 모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시 상황은.
“1984년 3월 31일 우리 중대의 장모 중위가 진급을 해 중대장실에서 회식을 했다. 회식 중에 중대장과 내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그렇지만 잠시 후 중대장실에서 그냥 나왔다. 이 과정에서 총을 겨누는 등의 상황은 없었다. 許일병은 중대장실 밖에서 대기하며 회식 수발을 했다. 그게

전부다.”
—의문사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조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내가 許일병을 죽이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가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위원회에서 오늘(28일) 당신의 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중대장실에서 소총을 든 채 막 나오는데 누군가 ‘잡으라’며 꺼안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 대목을 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한 것이다.”

—許일병이 자살했다고 생각하나.
“얼마 전까진 자살이라고 믿었는데... 위원회가 보여준 許일병의 시체 사진을 보고 타살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 이철재 기자

許일병 의문사, 진실은 뭔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중간조사 발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반론이 제기됐다. 의문사위원회는 1984년 4월 2일 새벽 중대 막사의 회식자리에서 한 술취한 하사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許일병의 시신을 그날 오전에 부대 내 폐유류고로 옮겨 두 발의 총격을 더 가해 자살로 위장한 사건을 군이 18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부대원 13명 중 9명을 취재한 결과 조직적 은폐조작은 없었으며, 문제의 하사관은 총격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원회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오는 9월 1일 현장검증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자신하고 있다. 우리는 두 개의 상충하는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예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다

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공권력의 남용에 따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신원직업을 맡은 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발표라면 또다른 의문을 낳지 않을 만큼 엄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의문사위원회는 국민적 공분(公憤)을 일으킨 이 사건의 진상 발표가 며칠 사이에 도전을 받은 점에 대해 석명(釋明)해야 한다. 우선 양측 사이에 매우 차이가 나는 사건 정황의 정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살인지, 타살인지가 명백해진다. 타살일 경우 누가 가해자인지, 왜 어떻게 조작돼 그 오랜 세월 은폐될 수 있었는지가 규명될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가동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동조사도 고려해볼지하다.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 뒷말이 안나오게 하는 것이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許일병 타살’ 은폐조작 논란

일부 부대원 “他殺일순 있지만 은폐는 없었다” 의문사추 “진술테이프 등 증거 내달 10일 공개”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허일근(許元根) 일병 자살조작 은폐사건’에 대해 당시 부대원 일부가 진상규명위의 발표와는 다른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와 사병 일부는 28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 일병이 타살했을 수는 있지만 진상규명위의 발표가 당시 정황과 다르며 사건이 조직적으로 조작되거나 은폐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에서 총을 쏜 당사자로 지목된 노모 중사는 “4월1일 밤부터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날 오전 2시30분쯤 기분 좋게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사병 중 일부는 “그 날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이들 중에는 위원회에서 노 중사가 총을 쏘았다고 증언한 사람 2명이 포함돼 있

으며 위원회는 이들의 진술을 담은 녹화테이프 등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노 중사도 ‘당시 술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난 와중에 총을 잡았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후의 일은 술에 취해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노 중사의 진술내용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며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최종 결과 발표 때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영기자 buddy@donga.com

헛갈리는 ‘許일병 미스터리’

84년 군복무 중 숨진 허일근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들이 잇달아 나와 혼란스럽다. 한 하사관이 술집에 허 일병을 쏘아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에 2발의 실탄을 더 발사해 자살로 위장했다는 첫 발표의 충격만큼이나 이 같은 갑작스런 상황발전 또한 충격적이다.

의문사위 발표의 핵심은 허 일병의 사인이 당시 군단국이 밝힌 것과는 달리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으며, 사건 현장에 있었던 10여명의 부대원들이 이를 알고도 지난 18년 동안 철저히 함구해왔다는 것 두 가지였다. 사람들을 경악케 한 것은 이 가운데 후자, 즉 고락을 함께 한 동료들이 이 끔찍한 자살위장 음모에 묵시적으로 가담하고 그후 긴 세월 단 한 명 예외없이 이를 비밀로 해왔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사자들의 대다수가 이 같은 사건의 핵심줄거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취재에 응한 관련자들 중에 내무반 술자리에서

총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이튿날 아침 멀쩡한 허 일병을 보았다는 사람까지 나왔다.

의문사위는 최종발표 때 확실한 증인과 증거를 밝히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의문사위와 국방부는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며 따로 갈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협조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10명이 넘는 관련자들이 18년 전의 사건을 두고 빈틈없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문사위와 국방부가 선입견을 버리고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공유하면서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면 진실찾기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의문사위의 출범 목적은 권위주의 시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 원혼과 유가족의 한을 풀고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힌다는 것이 행여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불행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許일병 세번째 銃傷전까진 생존”

당시 부검醫 추정... 의문사추 발표와 달라

의문사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허원근 일병의 자살 조작 과정은 많은 부분에서 의문과 논란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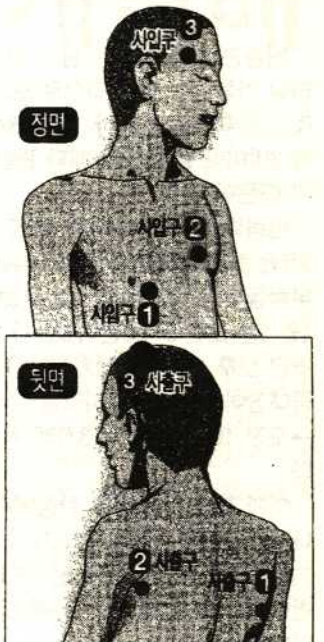
◆중대 내무반에서 오발사고 있었나=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84년 4월 1일 새벽 2~4시 사이 내무반에서 1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한 노 중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다. 또 부대원들은 오전 10시쯤 숨진 허 일병을 내무반에서 30m 떨어진 유류고로 끌고가 왼쪽가슴과 머리에 총 2발을 더 쏘았다는 것이다.

총격 때 심장이나 폐 또는 간 등을 건드리지 않아 치명상을 입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 번째 머리총상에 서도 ‘생활(生活)반응’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위 발표는 노 중사의 총에 한 발을 맞아 ‘사망’한 허 일병이 6~8시간 동안 내무반에 ‘방치됐다’가. 이날 오전 10시쯤 옮겨져 다시 2발의 총을 맞았다는 내용이다. 부검 결과와는 배치된다.

또 아무리 자살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대원들이

■ 허일병 총상부위와 순서



위원회선 “첫발 사망... 6~8시간후 추가사격” 내무반 발포·대대장 은폐지시 여부도 논란

그러나 조선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조용한 새벽 20평 남짓한 중대 막사에서 총성을 듣거나 사고 장면을 봤다는 부대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2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새벽에 총성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대대 상황병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허 일병은 첫발에 죽었나=당시 부검의는 허 일병이 세번째 탄환에 머리 총상을 입을 때까지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처음 1, 2차

이미 사망한 허 일병에게 굳이 두 발을 다시 발사했다는 발표 내용도 얼핏 납득이 안 간다. 의문사위는 이에 대해 “허 일병이 자살했음을 전 부대원에게 알리기 위해 일부러 두 발을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일병이 마지막 세 발째까지 살아있었다는 부검 결과가 옳다면, 가슴에 총상을 입은 허 일병은 살아있는 채로 내무반에 장시간 버려져 있었다는 뜻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상황 설정이다.

◆대대장이 은폐조작을 지시했나=당일 아침 일찍 대대장이 사고 수습을 위해 부대를 방문했는지도 논란이다.

의문사위는 대대장 운전병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병들은 “대대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현병대 조사 후 사병들이 대대적으로 포상휴가를 갔다고 설명했지만, 사병들은 “포상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중대장이 총성시간·실탄수 조작”

당시 헌병대 조사서 드러나

허원근 일병 사건은 당시 군 헌병대도 사건 직후엔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감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원근 일병이 서로 다른 부위에 3발이나 총을 맞은 데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헌병대 조사에 따르면 김 모 중대장(대위·99년 사망)은 최초 상황보고(총성 청취) 시간대를 조작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소초원들이 총성을 들은 시각은 4월 2일 오전 9시50분이었으나 허 일병 시체가 발견된 것은 오후 1시20분. 시차(時差)가 3시간30분이거나 나자 중대장이 총성 청취 시각을 오후 1시→오전 11시30분→오전 10시30분으로 3차례나 조작토록 지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건 직후 탄창에서 모두 3발이 발사됐으나 탄피는 2발만이 발견되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실탄 1발을 의도적으로 땅에 떨어뜨려 놓은 사실도 밝혀져 헌병대는 타살 및 사건 은폐조작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조사엔 이례적으로 육군본부 범죄수사단까지 투입돼 용의선상에 오른 3~4명을 대상으로 2주일 가량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혹독한 일 차례와 구타 등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자 11명의 알리바이가 모두 성립됐다고 군 소식통들은 전했다. 군의관들도 허 일병이 1차로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에 1발씩을 쏘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았고 3차로 오른쪽 눈썹 위에 총구를 밀착시킨 뒤 방아쇠를 당겨 절명한 것으로 소견을 냈다.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유족들의 사건 접수에 따라 조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가 28일 오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4년 사건 당시 입수한 현장 그림을 들고 당시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許永輪기자 younghun@chosun.com

사에 나선 것은 이로부터 16년9개월 만인 2001년 1월 13일이었다. 7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부대원 등 연인원 200여명을 조사하고 진술서만 2000여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조사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 20일 군 당국이 타살을 자살로 은폐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陳仲彦기자 jinmir@chosun.com

의문사委 “許일병 타살 은폐조작 증거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안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8일 지난 84년 군 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당시 부대원 13명 중 9명이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28일자 30·31면)와 관련,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특히(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첫발이 발사됐던 분명한 증거와 증언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이와 관련,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9명의 사병 중 2명이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2명의 신원과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84년 4월 2일 오전 2~4시 사이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기오발사고로 허일병이 사망했는지 ▲군 헌병대와 대대장 등이 조직적으로 허일병 사망을 자살로 조작·은폐했는지 ▲2일 오전 9시까지도 허일병이 여전히 살아있었는지 등 의문사위와 부대원들 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의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병 2명이 조사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으며 진술서는 물론, 증언 과정을 녹화까지 해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화테이프의 공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신원과 증언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9월 2일과 3일에 걸쳐 실시되는 7중대 현장조사에 이들 2명이 동행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또 사고 당일 밤 ‘술자리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으며 조직적 은폐·조작도 없었다’는 부대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박없이 “다음달 10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총을 쏜 당사자로 지목받은 노모 중사의 2·3회 진술서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어렵풋한 기억으로는 소총으로 설치할 때 〇〇〇이 진술인을 말린 것 같다. ...아마도 총에 장탄을 해 위협할 때 뒤에서 껴안은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오발하였는지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돼있다.

노 중사는 이에 대해 “의문사위가 ‘GOP에서는 실탄을 장탄하고 다니느냐’ ‘평소 부대원들을 구타한 적이 있느냐’는 식으로 별개의 질문을 한 뒤, 이를 연결해 마치 내가 그렇게 진술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27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혼선을 막기 위해 위원회의 마지막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활동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廉康洙기자 ksyoun@chosun.com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허일병 타살 증거·증인 있다”

의문사위, 참고인 ‘조작·은폐 부인’에 진술서 공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참고인(사고당시 군 관계자) 중 일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문사위의 발표는 당시 정황과 다르며 사건이 조직적으로 조작·은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일병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28

일 밝혔다.

의문사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문사위는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사건을 목격한 11명중(98년 숨진 대대장을 제외한) 10명을 조사했다”면서 “2명이 ‘진실’을, 5명이 ‘진실에 가깝게’ 말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총을 쏜 당사자로 지목된 모 하사관이 일부 언론에 “4월1

일 밤부터 술자리가 있었지만 이튿날 오전 2시30분쯤 기분 좋게 끝났으며 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맞서 이 하사관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진술서에는 이 하사관이 “아마도 총에 장탄을 하여 (한 사병을) 위협할 때... 그때 내가 오발을 하였는지 여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의문사위는 “참고인 조사과정은 녹화·녹음해 뒀다”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ahr@kyunghyang.com

‘허일병 사망’ 누구말이 맞나

‘허원근(許元根)일병 의문사 사건’의 관련자들이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내용을 부인하고 나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규명위는 ‘회식자리에서 싸움이나 총기사고가 없었다.’는 부대원 9명의 증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진술

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쏘았는가 규명위가 총을 쏜 당사자로 지목한 예비역 부

사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총을 쏜 적이 없으며 허 일병을 죽인 것은 중대장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규명위는 이 부사관이 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규명위 자료에는 “삽탄한(실탄을 삽입한) 총을 상황대 옆 총기대에 세워두었는데

소총을 들고 설치할 때 누군가 나를 말했다.”, “내가 총을 집어들었을 때 중대장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 내 몸통을 뒤에서 꺼안았는데 그때 내가 오발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 부사관의 진술이 담겨 있다.

●사고 시점은 지난 20일 규명위는 중간발표를 통해 84년 4월 2일 새벽

첫 총격 지목 하사관 “중대장이 쏠수도” 중대원들 “사고시간은 오전 11시” 아리송 의문사위 “사건은폐 증언·정황 확보” 반박

2~4시 사이에 첫 총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병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당시 상병)는 “오전 9시쯤 중대원 집합시 허 일병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권모씨(당시 이병)도 “오전 11시가 다 돼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명위는 “현장에 있던 중대원 가운데 2명이 ‘새벽 2시

쯤 노모 부사관이 술에 취해 총을 쏘았으며 총을 맞은 허 일병이 피를 흘리며 내무반 침상 위로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면서 “조사 과정을 담은 녹음·녹화테이프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적인 은폐기도 있었나 규명위는 중간발표에서 “대대간부와 중대장 등이 사건 직후 대책을 논의한 뒤 사체를 옮기고 핏자국을 지웠다.”고 밝혔지만 일부 부대원들은 “중대장 지시로 사

체발견 시간과 총소리를 들은 시간에 대해 입을 맞춘 적은 있지만 조직적인 은폐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규명위는 “사체를 옮기고 핏자국을 지웠다는 사병 2명의 진술이 확보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허원근씨 사망 '의문부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타살로 발표한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일부 중대원들이 28일 의문사위의 발표와는 다른 주장들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진술이 나왔나=사건 당시 장교와 사병 9명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의문사위 발표는 당시 상황과 다르며 사건이 조직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타살 용의자로 지목된 노모씨는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의문사위가 '타살 증인'을 확보했다는 이모 사병은 다른 4중대에서 관측수로 파견나온 병력으로 '노씨가 총을 쏘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간접적 사실을 의문사위에 증언했으

며 또다른 타살 증언자인 박모 상사 또한 인사계 간부로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노씨는 또 "의문사위는 사건이 오전 4시~6시 대대-연대로 보고됐다는 '상황 보고'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병 8~9명이 모두 자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왜곡된 사실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이와 함께 "4월1일 밤부터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음날 오전 2시30분쯤 기분 좋게 끝났다"고 주장했고 상당수의 사병들은 "그날 술자리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당시 행정반에 있었던 신모 상병은 "총소리는커녕 노 중사가 행패를 부린 적도

살해용의 노씨 "난 결백" 의문사위 "증인2명 있다"

없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의 대응=의문사위는 허 일병 타살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문사위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한 이들중 의문사위에서 노 중사가 총을 쏘았다고 증언한 두 사람이 포함돼 있다"며 "확정한 결과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기분 나쁘게 질문하는 바람에 불쾌한 마음으로 건성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진술한 녹화 테이프 등 자료를 갖고 있으며 다음달 10일 최종 결과 발표때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당시 술자리 싸움 없었다" 반박에 "두명 진술 테이프도 있어" 재반박

■ 허일병 사건 논란 가열

당시 부대원 증언에 의문사위 "터무니 없다"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4년 하사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20일 발표한 허 일병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위원회가 밝힌 사건 정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당시 부대원의 반박증언을 보

도하자 위원회와 유가족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신문은 28일자에서 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9명의 부대원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술자리에서 싸움은 없었고(장모 중위, 목격자들은 혹독한 조사를 받았지만 포상휴가는 없었다(오모 병장). 새벽에 사망했다는 허 일병을 오전 9시에 목격한 적이 있다(신모 병장)"는 내용을 실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28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허 일병이 하사관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침상위에 쓰러졌다는 두명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 녹화 테이프까지 갖고 있다"며 즉각

■ 허원근 일병 사망관련 부대원들의 진술 내용

부대원 진술	사망 시점	위원회 진술
오전 9시까지 살아 있었다	사망 시점	새벽 2-4시
싸움없이 끝났다	술 자리	간부들끼리 다툼
없었다	포상 휴가	있었다
사건후 한참동안 그대로	하사관 진술시점	사건후 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위원회는 또 하사관이 "자신은 허 일병을 쏘지 않았으며, 99년 사망한 중대장이 죽은 것 같다"고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2,3차 위원회 진술내용을 공개하며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사관은 "상황대 옆 총기대에 세워 두었던 소총을 장전할 때, 000가 나를 말린 것 같다"(2차 진술), "...000가 내 몸통을 잡고 원망하는 말을 하자 밀쳐냈다. 그때 사병(허원근 일병)이 넘어진 것 같고 내가 총을 집어 든 것 같다. 총에 장탄을 하며 위협할 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꺼안은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오발을 하였는지 어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3차 진술)고 진술했다.

한편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許永春)씨는 "사건 후 현병대에 서 날마다 순찰했고, 사건 발설에 대한 우려가 심해 일부 부대원은 제대 시기까지 한달 가량 늦춰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eversal of Soldiers' Testimony on 1984 Death Stirs Debate

By Seo Soo-min
Staff Reporter

The investigation into an alleged cover-up of a fatal shooting at military barracks 18 years ago is taking a new turn, with some key witnesses changing their descriptions of the circumstances of Pvt. Ho Won-kun's death.

Military personnel connected to the case claimed in interviews with the media Tuesday that there was no systematic cover-up of the case, rejecting an announcement by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last week that it had confirmed Pvt. Ho was accidentally shot to death by a drunken sergeant in April 1984.

Military authorities at the time

said Ho committed suicide.

Standing by its findings, the commission said it had gathered sufficient testimonies and evidence from three eyewitnesses to prove that Ho was shot by the officer.

"We will disclose all the details when we announce our final investigation results on Sept. 10," one investigator of the commission said yesterday.

The commission identified Sgt. First Class "Noh" as the man who shot Ho after a drinking session in the barracks.

Noh is denying the charges.

"The party on the evening of April 1 ended amicably," he stated, according to the daily Chosun Ilbo yesterday. Noh claimed he learned of Ho's death after re-

ceiving a phone call the following day, while on duty.

Similar testimonies backing Noh's statements came from two soldiers in the barracks at the time.

A man identified only by his family name, Shin, a Pvt. 1st Class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old the daily Munhwa Ilbo that Ho was alive at 9 a.m. on April 2, 1984.

The soldiers also refuted the commission's claims that they were given leave after the soldier's death as part of an attempted cover-up.

But Ho's family and civic activists accuse the soldiers of being pressured into lying by the Defense Ministry and the conservative media.

"The witnesses' identities should be protected, but the media found out and just went up to Noh and asked if he killed Ho. Who would admit it under those circumstances?" said Ho Yong-chun, father of Pvt. Ho, to The Korea Times yesterday.

He said he didn't trust the Defense Ministry's promise that it will look into the matter thoroughly with a special investigation, judging from their obvious cover-ups in 1984 and 1999.

Commission members also raised similar questions on irregularities in Noh's testimony. Previously, Noh told the commission that he "wasn't sure if he shot Ho," claiming he was drunk when it occurred.

ssm@koreatimes.co.kr

“許일병 자살 의심할 증거없어”

법의학자 8명, 작년 의문사쫓에 소견 통보

국내 법의학자들이 작년 허원근 일병의 부검 사진 등을 검토했으며 “자살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의대 황적준(黃迪駿·법의학) 교수는 29일 “나를 포함, 대한법의학학회 소속 법의학자 8명이 작년 하반기 의문사위 요청으로 허 일병의 부검 사진과 당시 부검 소견서를 검토했다”며 “8명이 종합 검토한 결

과 자살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소견을 의문사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지난 20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황 교수는 “이같은 소견은 사단 헌병대의 당시 수사 과정과 유족의 주장을 모두 제외한 채 객관적인 부검 자료만 검토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가슴 2곳 근접사격의 총상 흔적”

軍당국 부검기록으로 본 許일병 사망

지난 84년 군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은 과연 어떻게 죽어갔을까.

당시 군당국의 부검 기록에 따르면 허 일병은 총기를 몸으로부터 수cm 내로 접근시킨 상태에서 3발의 총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

허일병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84년 4월 2일 오후 1시20분쯤 중대본부에서 30m쯤 떨어진 폐유류고 옆에서였다. 발견 당시 가슴에 두발,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에 한 발의 총을 맞았으며 앞 이마는 총탄이 관통하면서 크게 함몰돼 있었다.

또 군복의 오른쪽 가슴에는 5.5×3cm, 왼쪽 가슴엔 6.5×4.5cm 크기의 화염에 그을린 흔적인 소흔(燒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군복에서는 화약 성분도 대거

검출됐다. 부검의 소견서에서 총상 주변에 남은 그을린 흔적과 화약 성분으로 보아 허 일병이 총을 거의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발사(근접사)된 총탄에 의해 숨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군복서도 화약성분 대량 검출돼 총상3곳 모두 근육위축 ‘生活’반응

부검기록에는 또 허 일병이 총을 맞은 가슴 2곳과 머리 등 3곳 모두에서 근육이 위축되는 ‘생활(生活)’ 반응이 나왔다고 돼 있다. 총을 맞을 당시 살아있는 상태라면 총탄이 관통할 때 근육이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대로라면 허 일병은 마지막 머리를 맞을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같은 부검기록은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 군 당국은 일반적으로 자살자들이 총기를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쏜다는 점을 들어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제압됐거나 의식을 잃고 있었다면 근접사격에 의한 타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밝혔지만 특별히 법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들지는 않았다.

다만 부대원 중 누군가가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망 6~9시간 뒤인 오전 10~11시쯤 폐유류고에서 두 발을 추가로 쏘았다는 타살 경위 추정에는 의문이 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채 그 시간 동안 생존해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사고 7일내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

軍사망사고 부실수사 양산

■ 민변 보고서

“법의학 전문가 없고 유족등 조사도 형식적”

허원근(許元根) 일병 자살조작 사건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7일 내에 1,2차에 걸쳐 사망원인까지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현 국방부 규정이 부실수사 유발과 함께 군 의문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에 제출한 ‘군 사망사고 처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전사상지처리규정 5조 1항은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 국방부 특조단 재조사결과 (1999.4~2002.6월)

사건당시 수사결과	특조단 재조사결과	건수
병사	순직	10
병사	순직	6
일반사	순직	4
자살	순직	2
병사	일반사	1
자살	병사	2
미상	병사	1

전문 보고한 후 7일 내에 사망 확인조서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보고서에서 이 규정 때문에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헌병은 12~18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고 첫 결론은 군의 경직성과 맞물려 대부분 그대

로 최종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본인·상관·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총기사고가 많은 군 사망사고의 특성상 세밀한 법의학 감정이 전제돼야 하는데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군 내부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변은 개선책으로 ▲유족과 군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사망사고 처리 위원회’ 설치 ▲국가의 감독·보호 아래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장기적으로 군 검찰의 독립 ▲현행 징병제도와 군체계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허일병 사망현장 2~3명 있었다”

의문사위, 인근초소 목격자 진술 확보...헌병대 수사기록과 대조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의문사위상규명위원회는 1일 허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된 중대본부 기름창고 부근에서 총소리가 들린 직후 현장에 2~3명의 병사가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허 일병이 ‘자살’했다는 1984년 4월 2일 오전 10~11시 사이에 총성 2발이 들리는 순간 중대본부에서 500여m 떨어진 16소초에

서 근무중이던 당시 사병 2명이 ‘총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현장에 2~3명이 있었고 그중 1명은 들것을 메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이 16소초로부터 오른쪽으로 500m쯤 더 떨어진 14소초에 근무했던 또다른 사병도 당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옆에 두 명이 서 있었다”고 말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그러나 사건 직후 현장을 조사했던

당시 7사단 헌병대는 16소초 11번 초소 사병으로부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리였으나,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진술을 받아,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의문사위는 이에 따라 3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진술이 주변상황과 부합하는지 당시 상황을 재연할 계획이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허일병 사망 발표때 이미 연대장에 보고

의문사규명위도 “장교가 사고직후 대대 보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애초 군수사에서 허 일병이 숨졌다고 발표된 오전 10시 이전에 이미 연대장이 사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당시 군부대의 ‘총기사고 은폐·조작’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당시 3연대장이었던 김아무개씨(소장 전역)는 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 당일 오전 7시께 대대장으로부터 ‘중대장 당번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중대장 당번은 모범 병사인데 자살했다는 것이 이상해, 대대장에게 ‘한 번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그 뒤 대대장으로부터 ‘중대장이 거칠게 다뤄 순간적으로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얼마 뒤 육군본부로 옮겨 사고종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일병 사건을 수사중인 의문사위 상규명위원회도 이날 허 일병이 새벽 시간대에 숨졌고, 또 사고 직후 이 내용이 상급부대에 보고됐다는 내용의 진술을 공개했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숨지던 날 아침, 19초소원 이아무개씨가 중대본부에 들렀을 때 본부 현관 오른쪽 모서리에서 허 일병의 주검을 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1대대장교 송아무개씨는 “새벽 4~6시께(허 일병이 소속된) 3중대장으로부터 ‘자살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했으며, 대대장은 차를 타고 3중대로 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대대 운전병 배아무개씨가 사건 당일 오전 6시께 대대장을 태우고 3중대에 다녀왔다고 말한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라 고 의문사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당시 중대본부 요원 권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이날 아침 대대장이 중대본부에 와서 중대장과 협의한 뒤, 사병들에게 “중대장 지시대로 움직이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김훈 최혜정 기자 hoonk@hani.co.kr

중앙 포럼

두 일등병 '죽음의 진실'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어퓨굿맨(A Few Good Men)'은 쿠바에 주둔하는 미군 해병대 기지에서 폭행으로 숨진 한 사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영화다.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산티아고 일병에게 '코드레드'라고 불리는 특수기함을 주다 숨지게 한 고참 2명은 살인 등 세가지 죄목으로 기소되고 '코드레드'를 명령했던 기지 사령관 제설 대령은 사건을 철저히 은폐 조작한다.

진상 규명 외면하는 공권력

변호를 맡은 कै피 중위는 사건 조작의 정황을 하나하나 풀어가지지만 은폐의 벽은 너무 높다. 부검의사와 소대장은 거짓 증언하고 항공 관제 일지와 산티아고 일병의 전출명령서는 사령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사후 조작됐기 때문이다.

난관에 봉착한 변호팀이 제설 대령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내 한 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에서 영화는 절정에 이른다. 명예와 자존심을 자극하는 कै피 중위의 유도신문에 흥분한 제설 대령은 "그

런 높은 해병이 아니야. 죽어도 싸. 그래 내가 죽었어. 내가 다 명령했어"라고 털어놓는다. 결국 제설 대령은 법정에서 체포되고 특수기함을 준 고참 2명은 살인 혐의에 무죄, 직무유기 부분은 유죄를 선고받는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라는 고참병의 대사가 인상적이다.

얼마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복무 중 숨진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군에서 조직적으로 타살을 자살로 은폐 조작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접하면서 언뜻 '어퓨굿맨'을 떠올린다. 군에 입대한 지 6개월 남짓, 전방부대에서 괴팍한 성격의 중대장 전령 노릇을 하며 이를 후면!갈 첫 휴가를 고대하던 許일병의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다면 그 진상이 어떻게 18년간이나 덮여 있을 수 있는가. 아들을 차마 땅에 묻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 어다니 許일병의 아버지는 왜 군 당국으로부터 "백번 천번 탄원해도 소용없다. 몸조심

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는가.

이 발표에 대해 당시 부대원들은 "은폐 조작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위원회 측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병들이 상관의 지시에 의해 은폐에 참여했고 수사 과정에서의 공포 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런 통념에 회의 를 느낀다고 한다. 2000년 10월 출범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을 26건을 포함해 모두 82건의 의문사를 규명한다. 현재까지 조사 완료한 33건 가운데 8건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인정하고 20건은 기각, 5건은 조사 불능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관련 공기관과 관련자들은 위원회의 조사에 철저히 비협조적이었고,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한 천수
논설위원

고백과 참회하면 풀리는데

최근 1980년대의 녹화사업(대학생·강제징집) 의문사와 관련한 출두 요구에 끄떡도 하지 않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이나 위원회의 문서 공개 요구에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고 버틴 기무사, 실지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례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청송교도소 박영두 사건을 시작으로 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의 진상을 밝혀나가는 동안 어느 공기관, 어느 관련 인사도 의례적이나 참회와 사과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

오는 16일 위원회 활동 마감을 앞두고 시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해자의 고백과 참회, 피해자의 용서로 화해를 이루는 것이 의문사 진상 규명의 참뜻일진대, 이같은 바람은 정녕 허망한 일이기만 할까.

“許일병 자살 증언
중대원들 입맞춰”

의문사추, 진술 확보

1984년 군에서 숨진 뒤 자살 처리됐다 다 최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2일 "규명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건 관련자들이 공모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에 따르면 許일병이 숨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대원 중 일부로부터 "규명위의 조사를 앞두고 중대원들끼리 '자살 처리했던 당초 헌병대 수사 결과대로 증언하자'고 말을 맞췄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중대원 11명 중 2명만이 하사관 盧모씨가 許일병을 사살했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사전 약속에 의해 자살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허일병 사망조작 상급부대도 알았다”

의문사추 부대원 진술 공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허원근(許元根) 일병 자살 조작 은폐사건’과 관련해 군이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작했고 상급부대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을 2일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허일병이 하사관(현 부사관)에 의해 첫 총탄을 맞은 뒤 중대장이 대대 상황실에 자살로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고 보고를 받은 대대장이 중대본부로 온 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이날 공개한 진술에 따르면 1대대 장교 송모씨는 “사고 당일인 1984년 4월 2일 오전 4~6시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사병으로부터 ‘3중대에서 자살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장과 연대 상황실

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대대장이 보고를 받은 뒤 중대장에게 전화를 해 사건을 파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1대대 사병 최모씨도 “2일 새벽에 3중대로부터 중대장 전령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3연대 김모 연대장도 “2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1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사고 당일 중대본부 바깥에서 근무하던 부대원들도 헌병대 수사기록에 나타난 시체 발견 시간 이전에 허일병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대대장이 사고 당일 피가 묻은 내무반을 둘러본 뒤 중대본부원들에게 ‘중대장 지시대로 잘 움직이라’는 말을 했고 대대 보안주재관 허모씨는 중대본부원들에게 은폐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당시 중대본부 하사·병장이 허일병自殺조작 사실 증언”

의문사추, 신원 공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일 허원근 일병 자살 조작·은폐 논란과 관련, ‘핵심 증언자’들의 신원과 진술 요지 등을 공개했다.

의문사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중대본부 소속 이모 하사와 전모 병장이 84년 4월 2일 오전 2~4시 사이에 노모 하사가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을 쏘 허일병이 맞았고, 김모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내무반을 물청소하는 등 자살로 은폐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사건 당일인 84년 4월 2일 오전에 허일병의 사망에 대해 자살로 보고받았다는 상급부대 관계자들의 진술도 공개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당시 1대대 부대대장인 송모 소령(현역 대령)은 “사건 당일 새벽 중대장으로부터 ‘허일병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장과 연대 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했고, 김모 연대장은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허일병이 자

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대대장을 태우고 허일병 소속 중대에 갔다는 운전병 배모씨의 진술도 공개됐다.

의문사위는 “이 같은 진술들은 허일병 자살 조작·은폐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부대원들 “사실무근”

그러나 당시 정모 대대장은 “사건 당일 새벽에 내가 3중대에 갔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당시 부대원들은 “의문사위의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허일병 사망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당시 7사단 헌병대 조사계장(63)은 “사망한 허일병을 그날 오후 처음 볼 당시 시체 강직이 거의 없었다”며 “새벽에 숨졌는데 6~7시간 뒤에도 강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廉康洙기자 ksyoun@chosun.com

“허일병 새벽시간에 숨져”

의문사규명위 진술공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원근 일병 사망을 둘러싼 군의 자살조작·은폐 논란과 관련, 허일병이 새벽 시간에 숨졌고 이를 부대원들은 물론 상급부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허일병이 사고 당일 새벽 이미 모 하사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추가로 2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발표에 대해 소속부대원들 다수가 이의를 제기하지만 당시 사고를 보고 받은 대대 간부·사병과 연대장의 진술로 볼때 그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 공개한 진술에 따르면 1대대 송모 장교는 “사고 당일 새벽 4~6시 사이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사병으로부터 ‘3중대에서 자살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장과 연대

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1대대 최모 사병도 “새벽에 3중대로부터 중대장 전령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으며 3연대 김모 연대장도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1대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진상규명위는 “대대장과 대대 보안주재관 허모씨가 사고 당일 오전 6~7시 중대본부를 방문했으며 대대장은 당시 본부원들에게 ‘중대장 지시대로 잘 움직이라’는 말을 했고 허씨 역시 중대장의 부탁에 따라 함께 중대본부원들을 상대로 조작·은폐 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중대본부원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허일병이 새벽에 내무반에서 오른쪽 가슴에 한발의 총상을 입고 오전 10~11시 중대본부 밖에서는 총탄 두 발만을 맞았음이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윤해기자

“대대급 대책회의서 은폐지시”

허일병사건... 추가진술 공개 의문사위, “10일 최종 발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일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진 뒤 자살로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과 관련, 총을 쏜 것으로 지목된 예비역 중사 노모씨의 행적과 상급부대 개입선을 밝히는 데 단서가 되는 참고인 진술을 추가 공개했다.

규명위는 이날 2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당시 노 중사가 허 일병에게 첫 총격을 가했고, 대대급 간부가 참여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중대장이 중대원들을 불러 입을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노 중사의 총격을 받고 쓰러진 허 일병을 내무반 밖으로 옮긴 뒤 물청소가 시작됐다는 중대원 이

모·전모씨의 증언을 확인해줄 당시 중대 인사계 박모씨와 소초원 김모씨의 진술을 추가로 공개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이들이 사건 직후 중대원들로부터 노 중사가 허 일병을 쏘고 이를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2발을 추가로 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최근 규명위 조사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 일병의 사망 소식을 들은 대대장 전모 중령이 2일 아침 중대본부를 방문, 중대장과 대책을 숙의한 뒤 돌아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당시 전 중령은 중대장과 노씨를 질책한 뒤 중대원들에게 “중대장 지시대로 잘 움직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규명위는 2,3번째 총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이며 사건의 은폐 조작을 누가 무슨 이유로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오는 10일 최종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許일병’ 조작사건 상급부대도 개입

의문사조, 관련자진술 공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허 일병이 새벽 시간대에 숨졌고, 이를 부대원들은 물론 상급부대 관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진술내용을 2일 공개했다.

이날 규명위가 공개한 진술에 따르면, 1대대 송모 장교는 “사고 당일 새벽 4~6시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사병으로부터 ‘3중대에서 자살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장과 연대 상황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1대대 최모 사병은 “새벽에 3중대로부터 중대장 전령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으며, 3연대 김모 연대장도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1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특히 대대 장교와 사병들이 “대대장이 사고 당일 오전 6~7시 중대본부를 방문해 ‘중대장 지시대로 잘 움직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추가 2발도 용의자가 쏘다”

許일병사건 간접진술 확보

1984년 하사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과 관련, 허 일병 시신 또는 확인 사실을 위해 추가로 2발을 쏜 사람은 살해 용의자인 하사관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일 당시 중대 인사계에 서 군 복무를 했던 박모씨로부터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술자리 때 하사관이 술에 취해 내무반에서 허 일병에게 총을 쏘으며 이후 대대장이 왔고, 하사관이 다시 시신에 2발을 더 쏘았다는 이야기를 당시 중대 본부원에게서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뿐 아니라 당시 사병이었던 김모, 이모, 전모 씨 등 3명도 위원회에서 “하사관이 추

가 총격을 가했다고 생각했다”거나 “하사관이 추가로 2발을 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들의 진술이 간접진술인데다 하사관 본인이 부정하고 있어 추가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당일 새벽 자살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에 당시 대대장이 직접 와서 중대장과 협의를 했으며, 대대장이 ‘중대장 지시를 잘 따르라’고 말하고 돌아간 후 중대장은 사병들에게 각각 임무를 부여해 사건 은폐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병들은 피를 치우고 내무반 물청소를 했으며, 일부는 내무반 입구에 있는 피흔적을 흙으로 덮고 발로 눌렀다고 위원회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허일병 자살조작 정황증거 충분”

의문사규명위, 당시 부대 관계자들 진술 공개 수사기록과 사체발견 시각 등 은폐 흔적 뚜렷

지난 84년 군부대에서 의문사 한 허일병의 자살 조작·은폐 논란과 관련, 허일병이 새벽 시간에 숨졌고 이를 당시 부대원들은 물론 상급부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이는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부대원들이 모 언론을 통해 허일병의 자살 조작·은폐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허일병 자살 조작·은폐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허일병이 사고 당일 새벽에 이미 모 하사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추가로 2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발표에 대해 소속 부대원들 다수가 이의를 제기하지만 당시 사고를 보고받은 대대 간부·사병과 연대장의 진술로 볼 때 그렇 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문사규명위는 “허일병이 새벽에 내부에서 오른쪽 가슴에 한발의 총상을 입고 오전 10~11시 중대본부 밖에서는 총탄 두 발만을 맞았음이 관계자들의 진

술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의 수사 기록과 현장약도, 당시 탄피 수색작업에 동원된 사병들의 진술 그리고 부검의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사건 당시 1대대 장교 송모씨는 “사고 당일 새벽 4~6시 사이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사병으로부터 ‘3중대에서 자살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장과 연대 상황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1대대 사병 최모씨도 “새벽에 3중대로부터 중대장 전령이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3연대장 김모씨는 “오전 7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1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

단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중대본부 바깥에서 근무하던 일부 하사관과 사병들도 헌병대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체발견 시각 이전에 허일병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대 인사계 박모씨는 “사고 당일 오전에 20초소에서 있다가 2방의 총소리가 나 중대본부에 가 보니 중대본부로부터 ‘새벽 숲자리에서 누군가 취해 내무반으로 나와 허일병에게 총을 쏘았고 대대장이 다녀간 뒤 사체에 2발을 더 발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의문사규명위는 3일 사건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오는 10일 허일병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n.com

‘허일병 자살조작’ 증언 추가 공개 **중대본부요원 ‘피살 목격’** **“주검 옮겼다 들어” 진술도**

허일병 사망 사고를 조사 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3일 사고현장인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당시 허일병의 ‘자살조작’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을 공개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당시 중대본부 요원이었던 전아무개씨의 증언에 따라 중대장실에서 술을 마시던 선임하사 노아무개씨가 중대장실 문을 발로 차고 나와 막사 안 책상을 걷어차고 허일병의 가슴에 총구를 밀착시키고 총을 쏘는 장면 등이 재연됐다. 전씨는 “당시 허일병의 등에서 한 피가 내 옷에 묻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현장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사관들은 전했다.

또 대대본부 상황병 최아무개씨의 대대장 전령 김아무개씨는 “새벽 2시께 3중대로부터 ‘자살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대대장 명령에 따라 운전병 배아무개씨를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운전병 배씨도 “동틀 무렵 대대장을 태우고 3중대로 왔다”고 증언하는 등 관련자 3명의 진술이 일치

해 당시 군헌병대가 허일병의 자살시 간이라고 주장한 오전 10시 이전에 이미 사고가 나 대대장이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또 오전 10시~11시 사이, 두 발의 총성이 들릴때 14소초에서 중대본부

앞 이등병력 2~3명을 목격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김아무개씨는 “나중에 ‘타살인데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체를 옮겨 조처를 취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실시된 실지조사에는 당시 중대본부 요원 등 6명의 증인을 비롯해 위원회 김준곤 상임위원 등 위원회 직원, 허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 등 유족, 취재기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철원/김훈 기자 hoonk@hani.co.kr**



스러져간 아픔 재현 허일병 타살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이 군복을 입고 3일 오후 화천군 화천읍 소재인 강원도 화천군 해당부대 내부방이었던 곳에서 현장 재현 실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화천/임종진 기자 stepano@hani.co.kr**



3일 오후 철원군 군부대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된 가운데 조사위원들이 당시 시체가 발견된 유류창고 앞에서 자살 상황을 재현해 보이고 있다. **철원=변선구 기자**

許일병 사건 현장조사 의문사위, 증언 추가공개

1984년 군에서 숨진 뒤 자살 처리됐다
다가 최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된 허원
근 일병 사건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규명위)는 3일 사건 현장인
강원도 철원군 모 사단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규명위는 유족과 당시 중대본부 부
대원 6명 등을 참가시킨 가운데 사건
발생 장소인 중대본부 건물과 폐유류
창고 주변 등지에서 許일병 사망 상황
을 재연했다. 또 사망 원인을 조작했
다는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공개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당시 사병 **金모**
씨는 "당시 초소 근무 중 두세 발의
총소리를 들었으며, 나중에 한 부대원
에게서 '중대본부에서 타살 사고가 났
는데 누군가 이를 자살로 은폐하기 위
해 현장에서 시체를 옮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철원=남궁옥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허원근일병 사건 부대서 현장검증

의문사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
상범·韓相範)는 '허원근(許元根) 일
병 자살 조작 은폐사건'과 관련해 3
일 사건현장인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7
사단 1대대 3중대에서 현장조사를
가졌다.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반 동안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허 일병
의 자살을 조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공개
됐다. 또 사건 발생 상황이 재연됐고
시신 발견지점 확인이 이뤄졌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당시 대
대 상황실로 '허 일병 자살'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인근 4중대에서
'중대원이 총성을 들었다'는 보고를
했다는 상황실 관계자의 진술도 공
개했다.

손호림기자 arysong@donga.com

허원근 일병 사망관련 의문사위 軍부대 현장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
상범·韓相範)는 3일 지난 84년 허원
근 일병이 사망한 강원도 화천군 7사
단 3연대 사건 현장에서 실시조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의문사위는 조사에서 "허 일병이
노모 중사에 의해 타살된 후, 자살로
은폐됐다"고 했다는 이모 하사와 전
모 병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중대본
부에서 허 일병이 총에 맞는 과정 등
을 재연했다.

그러나 핵심 증언자인 이 하사와
전 병장 중 전 병장만 참석했고, 현
장 재연 장면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
았다. 의문사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부터 전 병장만 참석한 가운데 현장
재연을 시작해 보도진이 현장에 도
착한 오후 1시 이전에 끝났다. /**華川**
=廉康洙기자 ksyoun@chosun.com

"의문사위 활동 위헌소지" 憲辯, 헌법소원 제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
장 정기승·鄭起勝)은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이에 근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
범·韓相範)의 활동과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3일 오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변' 총무인 임광규(林光圭·63)
변호사는 "정치적 배경에서 임명된
9명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의
문사위의 방식은 헌법에 정한 사법
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했다. /**陳仲彦기자 jinmir@chosun.com**



허일병 사건 재현 3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모부대에서 이뤄진 허원근 일병 의문사 현장실지조사에서 의문사규명위원회와 관련 부대원들이 당시 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화천=우한울기자 deunso@kdaily.com>

“권한 강화·활동기한 늘려야”

민변등 의문사법 개정 촉구

오는 1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앞두고 조사기간 연장과 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규명위에 접수된 86건의 의문사 가운데 55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의문사 빅 5' 가운데 장준하·이내창·이철규·박철수 사건은 국정원과 김·경의 열조거부로 진상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명위 위원과 조사관들이 잇따라 국정원과 기무사를 상대로 실지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들 기관의 완강한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규명위 관계자는 "현행 의문사특별법이 규명위에 압수수색권, 제자추적권, 강제구인권 등을 부여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상범(韓相範)위원장은 최

근 국회 공청회에서 "현재 진행 상황으로 는 기한 내에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없다."며 기한연장과 권한강화를 위한 3차 법개정을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덕우(李德雨)변호사도 위원회의 활동기한 삭제와 특별검사 조항 신설, 재심청구 허용과 과태료 인상 등을 담은 의문사법 개정안 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20일 성경을 통해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요구했다.

박형규(朴炯圭)목사와 김삼웅(金三雄)전 대한매일 주필 등 규명위 자문위원들도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기한연장과 권한강화, 반(反)인권적 국가법외의 공소시효 배제 등을 담은 건의문을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에서는 김원웅(金元雄)·이창복(李昌福) 국회의원 등이 공정한 의사를 밝혔을 뿐,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세영기자>

許일병 자살조작 은폐 의문사, 현장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일병 자살조작은폐 사건'과 관련, 3일 강원도 화천군 제7사단내 사건 현장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벌였다.

유족 16명과 당시 중대본부 부대원 6명, 그리고 취재진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조사에서 규명위는 사건 발생장소인 중대본부 건물과 폐유류고 주변 등에서 당시 허 일병 사망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지금까지 받아낸 진술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화천=우한울기자



허일병사건 현장 조사 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이 허원근 일병 타살 현장인 강원 화천 육군 모 부대를 방문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류효진기자